

2020 지방직·서울시 공무원 사회 (2020. 6. 13 시행) 문제 및 해설

문 1. 국제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영토, 국민, 주권을 지닌 국민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 ② 국제연맹은 미국의 참여와 주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탈퇴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③ 미국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는 국가에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 ④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면서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으로 인한 분쟁은 오히려 증가했다.

문 2. 국가의 구성요소인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일반 사회 집단도 소유할 수 있다.
- ㄴ.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만이 갖는 권한이다.
- ㄷ.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소재가 국민에게 있다.
- ㄹ. 주권은 대내적으로 최고성,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갖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출제 영역】 정치와 법 - 국제 사회의 변천

【해설】

- ② 국제 연맹의 경우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를 계기로 이후 국제 연합의 경우 강대국들을 모두 참여시키면서 국제 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30년 전쟁 종식의 결과 체결된 베스트팔렌조약은 기존의 불명확한 영토를 확실하게 경계지음으로써 자국 내의 왕권이 절대적으로 미치게하여 왕권 강화를 가져 왔으며, 근대적 의미의 주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 ③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시대 자유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화 위협에 직면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경제적 원조 및 군사적 지원한 것이다.
- ④ 냉전이 종식되면서 자국은 이념이 아닌 실리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오히려 냉전 시대보다 민족, 종교, 영토, 자원과 관련된 국지적 분쟁은 더욱 증가하였다.

【정답】 ②

【출제 영역】 정치와 법 - 주권

【해설】

- ㄷ.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보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에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 ㄹ.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 ㄱ. 주권의 소재는 과거 중세 시대에서는 군주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근대 이후에는 국민에게 있다고 확립되었다. 군주 주권론과 국민 주권론 사이에 과도기적으로 국가 주권설이 주창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군주 주권론에서 국민 주권론으로 이양하는 과도기적 이론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일반 사회 집단이 주권을 소유한다고 할 수는 없다.
- ㄴ. 주권은 대통령만이 갖는 권한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갖는 권한이다.

【정답】 ④

문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역 주민들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가진다.
- ② 기초의회는 비례대표 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 ④ 교육자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교육감을 두고 있다.

【출제 영역】 정치와 법 - 지방자치제도

【해설】

- ①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제 요소로서 주민 발안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등에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19세 이상의 지역 주민은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제청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단 주의할 것은 지역 주민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직접 조례 제정 및 개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오답 피하기】

- ②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모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 광역 의회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고, 기초 의회 의원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③ 예산의 심의·확정하는 것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국회가 예산의 심의·확정하고 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것에 대응한다.
- ④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광역단체에만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고, 기초단체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하지 않는다. 기초단체에는 별도의 교육장을 통해 교육 사무를 집행하게 한다.

【정답】 ①

문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의원 A는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려고 한다.
- 정부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 ① ㉠의 발의자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이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출제 영역】 정치와 법 - 법률 개정 절차

【해설】

- 첫 번째 사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고, 두 번째 사안은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이다.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법률안에 대해 환부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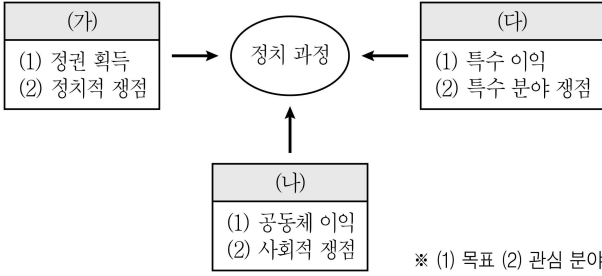
【오답 피하기】

- 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상임위원회는 발의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곳이고,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회기계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회기계속의 원칙이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등의 의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그 의안을 폐기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인계하여 계속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단,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②

문 5. 그림의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중 하나이다)



- ※ (1) 목표 (2) 관심 분야
- ① (가)는 정치적 총원과 여론 형성 및 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나)는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집단이다.
 - ③ (다)는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
 - ④ (가)와 (다)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출제 영역】 정치와 법 - 정치 참여 주체

【해설】

(가)는 정당, (나)는 이익집단, (다)는 시민단체에 해당한다.

④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에 한한다. 시민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정치적 책임

-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언행과 관계되는 정치적 결과에 대하여 지는 책임
- 쉽게 말하면 자기를 뽑아준 곳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보면 됨. ⇒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짐.

【오답 피하기】

- ① 정당은 정치 지도자 육성, 선거에 후보자 추천, 대표 배출을 통해 정치적 총원 기능을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형성하여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기능을 한다.
- ②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모두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집단들이다.
- ③ 이익집단이 특수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할 경우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하여 공익을 훼손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

【정답】 ④

문 6. 연령기준과 관련된 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25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제 영역】 정치와 법 - 연령과 관련된 법

【해설】

②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은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이다. 이 중에서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는 공직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서는 만 40세 이상 규정만 있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40세 이상 + 국내거주 5년 이상의 요건을 요한다.

헌법 제60조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우리 민법에서는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혼인할 수 있다고 보고, 만 18세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한 경우 성년의제 되어 사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는 성년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④ 올해 바뀐 규정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적용되었다. 즉, 과거 만 19세 이상에 부여한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개정 2020. 1. 14.>

【정답】 ②

문 7. 상점 절도를 저지른 갑 ~ 정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구분	갑	을	병	정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인가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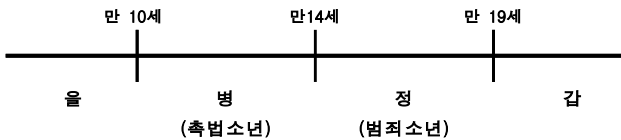
- ㄱ. 갑과 정은 모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ㄴ. 정의 연령은 을, 병보다 높지만 갑보다는 낮다.
 ㄷ. 을, 병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이다.
 ㄹ. 검사는 정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출제 영역】 정치와 법 - 연령에 따른 형사 사건 처리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갑~정의 연령대를 추론하는 것이다.
 · 우선 갑과 을은 10세 이상의 소년이 아니므로 10세 미만이거나 성년이 된다. 그런데 갑은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였으므로 성인이 될 것이고, 을은 만 10세 미만이 될 것이다.
 · 병과 정은 10세 이상의 소년이므로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다. 그런데, 병은 기소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병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이 된다. 반면 정은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범죄 소년'에 해당한다.



- ㄴ. 위의 그림을 참조하면 정의 연령은 을, 병보다 높지만 갑보다는 낮다.
 ㄷ. 을과 병은 모두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미성년자이다.
 ㄹ. 검사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인 정에 대해서는 검찰은 소년법에 대해 보호처분을 받게할 목적이라면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형벌 처분을 받게할 목적이라면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갑은 성인이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다.

▶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죄질 및 범법·의도 등을 살펴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지역의 범죄 예방 위원들에게 선도를 위탁하는 제도.
- 요건 ㉠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 ㉡ 재범 가능성 희박

【정답】 ④

문 8.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대상 공직이 아닌 것은?

- ① 대법원장
 ② 감사원 감사위원
 ③ 국무총리
 ④ 대법관

【출제 영역】 정치와 법 - 인사 청문회 대상

【해설】

헌법 시험에서나 나올만한 문제이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하는 국가 기관을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② 감사원과 달리 감사위원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아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인사 청문회 대상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 / 대법관
-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국제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모의장 / 한 국은행 총재 / 특별감찰관·한국방송공사 사장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

(국 / 대 / 대 / 헌 / 감)

- 국무총리
-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 감사원장

【오답 피하기】

- ①, ③, ④ 모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사 청문회의 대상이고,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 기관이다.

【정답】 ②

문 9. 갑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만 18세인 갑은 친권자인 양부모의 동의를 얻어 을이 사장인 주유소에서 하루 8시간씩 근로를 하게 되었다. 사장인 을은 근무 기간이 3개월이 안 될 경우 유급 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갑은 3개월간 쉬는 날 없이 성실하게 일하였다. 그 동안 학업을 병행하느라 월급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양부인 병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의 임금이 병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 ①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민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양부모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갑의 임금을 대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 ④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휴식 시간은 1일 1시간 보장되고, 근로 시간은 1일 30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출제 영역】 정치와 법 - 근로 계약 및 근로기준법

【해설】

갑은 만 18세이므로 연소 근로자는 아니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 ②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오답 피하기】

- ①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정답이 아니다. 우선 갑은 연소 근로자가 아니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 규정에 당사자 합의 시 1주일에 12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일 7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다. 또한 갑이 설명 연소자로 보았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 시 1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다. 또한 임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청구한다.

근로기준법 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근로 기준법에 법정 휴게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4시간 근무 시 근로 도중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을 근로 도중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정답】 ②

문 10. 민법의 기본원리인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구분	관련 내용
(가)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나)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	가해자는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보 기>

- ㄱ. (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 ㄴ. (나)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 ㄷ. (다)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 ㄹ. (가)와 (다)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출제 영역】 정치와 법 - 정치 참여 주체

【해설】

- (가)는 소유권의 공공복리의 원칙, (나)는 계약자유의 원칙, (다)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해당한다.
- ㄷ. 제조물 책임법에서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 ㄹ. (가)와 (다)는 모두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으로 이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ㄱ. 근대 민법의 수정 원리가 등장하였더라도 여전히 근대 민법의 자유 원리를 기본원리로 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의 사적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해당한다.

【정답】 ④

문 11.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수집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
- (나) 자기주도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선정
- (다) 자기주도학습 태도를 지닌 고등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 도출
- (라) ○○시 △△고교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마) 학업 성취도는 1학기과 2학기의 지필평가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측정하기로 결정

- ① (가) 단계와 (다)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적 태도가 요구된다.
- ② (가) 단계에서는 (다) 단계와 달리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다.
- ③ (나) 단계와 (마)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 ④ 연구는 (나) → (라) → (가) → (마) → (다)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출제 영역】 사회 문화 - 양적 연구 방법의 과정

【해설】

- (가) 수집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 ⇒ **자료 분석**
- (나) 자기주도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선정 ⇒ **연구 주제 선정**
- (다) 자기주도학습 태도를 지닌 고등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 도출 ⇒ **가설 설정**
- (라) ○○시 △△고교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자료 수집**
- (마) 학업 성취도는 1학기과 2학기의 지필평가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측정하기로 결정 ⇒ **연구 방법 설정**

- ③ 연구 주제 설정과 연구 방법 설정의 경우 가치 개입이 필요한 구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자료 분석 단계는 계량화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을 하여야 하는 구간으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설 설정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구간으로 가치가 개입되는 구간이다.
- ② 자료 분석 단계는 계량화된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통찰을 할 수 없다. 반면, 가설 설정의 경우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통찰을 할 수도 있다.
- ④ 연구는 (나) → (다) → (마) → (라) → (가)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답】 ③

문 12. 다음에 제시된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회사 내 노동조합
- B. 직장 내 등산 동호회
- C. 환경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 ① A는 자발적 결사체이자 비공식 조직이다.
- ② B는 공식 조직으로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 ③ C는 A와 달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 ④ A ~ C는 모두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는 이익 사회이다.

【출제 영역】 사회 문화 - 사회 조직, 자발적 결사체

【해설】

- ④ 노동조합, 동호회, 시민단체는 모두 사회에 다원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선택, 즉 선택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이익사회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노동조합은 자발적 결사체이기는 하지만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회사 내에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 집단 중에서도 그 i)목적과 경계가 뚜렷하고, ii)구성원의 지위와 역할도 명확하게 되어 있으며, iii)규범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으로 사회 조직(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 ② 직장 내 등산 동호회는 공식 조직 내에서 관심 영역에 대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단으로 친밀감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규정에 좌우되지 않는 집단인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또한 등산 동호회의 경우 구성원 간의 전인격적이고 비형식적인 관계가 나타나므로 1차 집단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③ 선천적, 자연 발생적인 관계를 매개로 결성된 집단을 공동 사회라고 하는데, A~C는 모두 구성원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 의도적, 선택적으로 결성된 집단으로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정답】 ④

문 13. 자료 수집 방법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 수집 방법	특 징
(가)	-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수의 대상으로 부터 자료를 얻는 데 용이함 - 통계처리가 용이하며 비교 분석 연구에 적합함
(나)	- 문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음 - 응답자만이 알고 있는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을 조사할 때 유용함 -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직접 파악할 수 있음

- ① (가)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 ② (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 ③ (다)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 ④ (가), (나)와 달리 (다)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출제 영역】 사회 문화 - 자료 수집 방법

【해설】

(가)는 질문지법, (나)는 면접법, (다)는 참여 관찰법에 해당한다.

① 질문지법은 실험법과 함께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고,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양적 연구는 주로 수량화·계량화된 자료를 이용하는데, 주로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통하여 수량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은 질문지법이고, 면접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 ③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실험법이다.
- ④ (나)도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즉 (가)와 달리 (나)와 (다)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해야 한다.

【정답】 ①

문 14. 사회화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개인은 사회적 환경 속의 다른 대상자들처럼 자신을 대상으로 보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형성해 간다. 또한 개인이 자아 관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강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가족, 또래 집단 등이 중요하다.

을: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배우고, 게임의 규칙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모방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태도와 역할을 배우게 된다.

- ① 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은 사회의 지배 집단에 의하여 규정된다.
- ② 사회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화는 사회구조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 ③ 사회화는 언어나 몸짓, 기호와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다른 사회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④ 사회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며, 기득권층에 유리한 가치와 행동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출제 영역】 사회 문화 -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해설】

사회화 과정에서 갑은 거울에 비친 자아, 을은 일반화된 타자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미시적 과정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③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사회화를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보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①, ④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②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정답】 ③

문 15. 다음 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

구분		부모의 계층			
		상	중	하	계
자녀의 계층	상	2	8	10	20
	중	6	14	40	60
	하	2	8	10	20
	계	10	30	60	100

- ①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 ② 부모 세대 상승의 경우 세대 간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 ③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에서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 ④ 부모가 중층인 경우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같다.

【출제 영역】 사회 문화 - 계층 이동에 관한 자료 분석

【해설】

- ④ 옳은 내용이다. 아래 표 참조. 위의 8은 부모가 중층인 경우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이고, 아래 8은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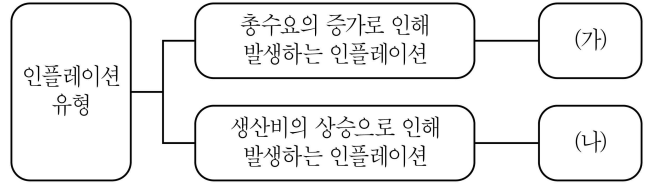
구분		부모의 계층			
		상	중	하	계
자녀의 계층	상	2	8	10	20
	중	6	14	40	60
	하	2	8	10	20
	계	10	30	60	100

【오답 피하기】

- ① 자녀 세대는 상층 : 중층 : 하층 = 20 : 60 : 20으로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에 해당한다.
- ② 부모 세대 상승의 경우 2%는 세대 간 이동을 하지 않았지만, 8%(6+2)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다. 또한 부모 세대 이전 세대와의 세대 간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계층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 ③ 위의 표를 가지고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 이동 비율은 알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세대 각각의 세대 내 이동의 비율은 알 수 없다.

【정답】 ④

문 16. 그림 (가)와 (나)의 인플레이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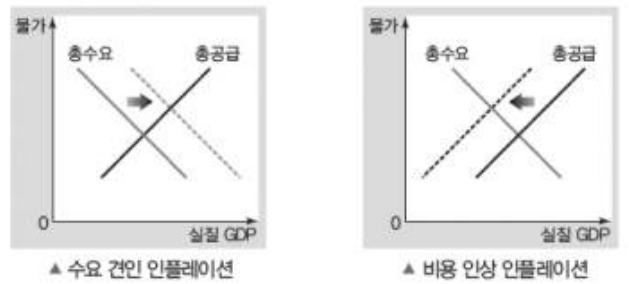


- ① (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
- ② (나)의 원인은 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다.
- ③ (가)는 실질 GDP의 증가, (나)는 실질 GDP의 감소를 가져온다.
- ④ (가)는 총수요곡선의 우측 이동, (나)는 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출제 영역】 경제 - 인플레이션의 두 유형

【해설】

(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고, (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 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이다. (가)는 경기가 호황일 때 나타나는 것으로 물가 상승과 더불어 실질 GDP도 증가하여 실업률은 낮아진다.

【오답 피하기】

-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비(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 ③, ④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총수요 곡선 우측 이동)로 인하여 실질 GDP는 증가하지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의 감소(총공급 곡선 좌측 이동)로 인하여 실질 GDP는 감소한다. (위의 그림 참조)

【정답】 ①

문 17. 다음은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각 빈칸에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한다)

구분	생산 측면의 (가)	소비 측면의 (나)
영향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
문제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
개선책	(㉤)	(㉥)

- ① (가)는 '외부 경제', (나)는 '외부 불경제'이다.
- ② ㉠과 ㉡ 모두 '작다'이다.
- ③ ㉢은 '과다 생산', ㉣은 '과소 소비'이다.
- ④ ㉤은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은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이다.

【출제 영역】 경제 - 외부 효과

【해설】

생산 측면에서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고 하였으므로 (가)는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고, 편익 측면에서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고 하였으므로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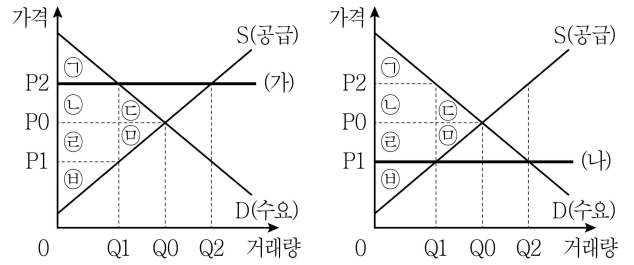
③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는 과다 생산이 문제되고,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는 과소 소비가 문제된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외부 불경제' (나)는 '외부 경제'가 들어간다.
- ②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가 들어가고,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에서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가 들어간다. 즉 ㉠과 ㉡ 모두 '크다'이다.
- ④ ㉤은 생산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가 들어가고, ㉥은 소비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이 들어간다.

【정답】 ③

문 18. 정부가 시장에 대해 두 가지 가격규제 정책 (가)와 (나)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를 시행하면 Q1 ~ Q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사회적 잉여 ㉢ + ㉣이 감소한다.
- ②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였던 ㉢ + ㉣은 소비자 잉여로 바뀐다.
- ③ (가)와 (나),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잉여 ㉢ + ㉣이 감소한다.
- ④ (가)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출제 영역】 경제 - 가격 규제 정책

【해설】

(가)는 가격 하한제이고, (나)는 가격 상한제이다.

③ (가)와 (나),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잉여 ㉢ + ㉣이 감소한다. (아래 내용 참조.)

【오답 피하기】

① (가)를 시행하면 Q1 ~ Q2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사회적 잉여 ㉢ + ㉣이 감소한다.

▶ (가)의 가격 규제에 따른 잉여의 변화

(1) 소비자 잉여

㉠, ㉡, ㉢ ⇒ ㉠

(2) 생산자 잉여

㉢, ㉣, ㉤ ⇒ ㉣, ㉤, ㉥

(3) 사회적 잉여

㉠, ㉡, ㉢, ㉣, ㉤, ㉥ ⇒ ㉠, ㉡, ㉣, ㉥

⇒ 사회적 손실 (㉢, ㉤)

②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였던 ㉢ + ㉣이 모두 소비자 잉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은 소비자 잉여가 되지만, ㉣은 사회적 손실이 된다.

▶ (나)의 가격 규제에 따른 잉여의 변화

(1) 소비자 잉여

㉠, ㉡, ㉢ ⇒ ㉠, ㉡, ㉣

(2) 생산자 잉여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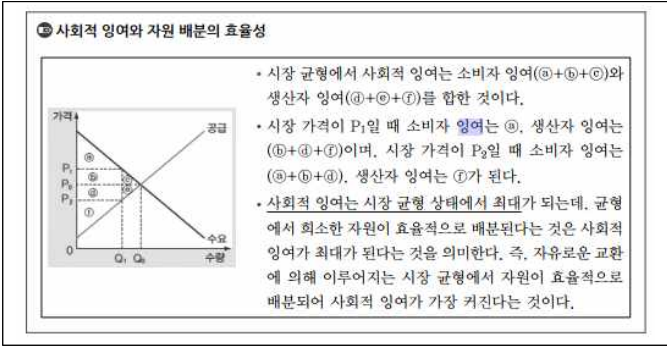
(3) 사회적 잉여

㉠, ㉡, ㉢, ㉣, ㉤, ㉥ ⇒ ㉠, ㉡, ㉣, ㉥

⇒ 사회적 손실 (㉢, ㉤)

④ (가)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는 반드시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는지 알 수 없다. 반면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는 반드시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는지 알 수 없다.

【정답】 ③



문 19. 다음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각 국가 통화 가치의 변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원화	엔화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상승	하락

- ① 한국 기업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 ②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한다.
- ③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미국 사람들의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한다.
- ④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

【출제 영역】 경제 - 환율의 효과
【해설】
 여러 국가의 통화 가치가 나오면 가치가 높은 화폐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된다. 위의 표를 통해 원화>달러화>엔화 순서로 가치가 나타난다.
 ② 원화의 가치가 높으므로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한다.
【오답 피하기】
 ① 원화의 가치가 높으므로 한국 기업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③ 원화에 비해 달러화의 가치가 낮으므로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미국 사람들의 여행 경비 부담은 증가한다.
 ④ 원화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환율이 하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된다.
【정답】 ②

문 20. 다음은 각 연도의 물가 상승률과 명목 GDP 증가율을 나타낸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되며, 실질 GDP 측정의 기준년도는 T - 1년이다)

구분	T년	T + 1년	T + 2년
물가 상승률(전년도 대비, %)	0	3	1
명목 GDP 증가율(전년도 대비, %)	0	3	-1

- ① T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
- ② T년에 비해 T + 1년의 실질 GDP는 증가하였다.
- ③ 실질 GDP는 T + 2년이 가장 크다.
- ④ GDP 디플레이터는 T + 2년이 가장 크다.

【출제 영역】 경제 -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
【해설】
 기준년도가 T-1년이므로 T-1년의 명목 GDP나 실질 GDP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물가지수(=GDP 디플레이터)가 10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물가 상승률과 명목 GDP 증가율을 통해 실질 GDP의 증가율을 알 수 있다.
실질 GDP 증가율 = 명목 GDP 증가율 - 물가 상승률

구분	T-1년	T년	T+1년	T+2년
물가 상승률(전년도 대비, %)		0	3	1
물가 지수 (GDP 디플레이터)	100	100	103	104.x
명목 GDP 증가율(전년도 대비, %)		0	3	-1
실질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		0	0	-2
실질 GDP	a(모름)	a	a	0.98a

④ 물가가 감소한 적이 없고 같거나 계속 상승하였으므로 T+2년에서 가장 크다. 이를 수치로 나타내면 위의 표에서처럼 대략 104.xxxx 쯤이 될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T-1년이 기준 연도이므로 T-1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고 T년에 물가가 0% 상승했으므로 T년도에도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② 실질 GDP의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므로 각각 연도마다 실질 GDP 증가율을 구해보면 T+1년은 T년에 비해 0% 증가하였으므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실질 GDP는 계속 동일하다가 T+2년에 2% 감소하였으므로 오히려 T+2년이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